

오피니언

월/요/광/장

안진



이랜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 해산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실현될 날은 언젠가, 또 국가권력은 중립을 지키기 힘든 것일까 등의 복잡한 심정이 든다. 이랜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노동권 보장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경제활동 여성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빈곤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점점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월수입 80만원 정도의 일자리를 잡기 위해 회사가 고용한 경비업체 '용역강패'들의 폭력에 내동댕이쳐지면서도 기를 쓰며 일어서고, 농성현장에서 전투경찰에게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힘없는 여성들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쉽게 만나는 계산대의 계산원들이다. 한국사회는 지난해 드디어 여성경제활

동인구 50%를 넘어섰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70~80%에 이르는 OECD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던 산업화 초기인 1960년 26.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물론

이랜드 사태와 여성의 노동인권

계약직, 단시간,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고용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는 일의 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권을 누리기가 힘들다. 또 성 평등사회의 실현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이랜드 사태의 원인은 그룹의 산하 사업장인 뉴코아, 이랜드, 홈에버 등의 경영 행태에 있다. 사태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안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체 계약직 350여명 중 330여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랜드 그룹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1주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 'O'개월 백지 계약서 요구,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변조 등 편법이 난무했다. 또, 용역으로 전환시킨 계산원 업무는 위장도급과 외주용역, 불법과건을 부추기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 시급한 것은 현행법 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정부가 중립적인 조정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일이다. 국

여를 더 적게 주거나 임신한 여성에게 매일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보호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위법상태를 방치하여 사태를 키웠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장도급과 외주용역, 불법과건을 부추기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 시급한 것은 현행법 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정부가 중립적인 조정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일이다. 국

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할 때 물리력을 동원해야 정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협상 결렬 이후 이랜드 노조의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시킨 것은 광범한 시민들에게도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한 행위는 비정규직 법안을 사용자 하여금 입법취지에 맞게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악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피해가는 비도덕적인 기업의 편에 선다면 여성들과 시민단체들, 양심 있는 학자들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회의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랜드 사태는 30여년 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 YH 여성노동자들이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의 공포함, 구사대의 폭력을 연상하게 한다. 국가가 노사의 중재자의 역할을 방치하면 시민들은 최소한의 경영윤리조차 지켜린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법안을 준수하기는커녕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하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은 기업의 범위반에 동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광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원전 사고' 급증 안전성 재점검 서둘러라

올 들어 우리나라 원전의 각종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의 니가타현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가동 중단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의 가동 중단 사고 급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광원전이 있는 광주·전남 지역으로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영광을 비롯한 고리·월성·울진 등 가동중인 20개 원전에서 발생한 불시고장정지 사건은 모두 8건이었다. 이는 지난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6.6건, 2002년 8건, 2003년 11건보다 훨씬 많은 뿐 아니라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걱정이다. 영광원전 역시 올 들어 벌써 2건의 가동중단 사고가 있었다. 원인별로는 발전관련 설비에서 발생

한 자연열화해 4건으로 가장 많고 정비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의 니가타현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가동 중단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의 가동 중단 사고 급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광원전이 있는 광주·전남 지역으로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영광을 비롯한 고리·월성·울진 등 가동중인 20개 원전에서 발생한 불시고장정지 사건은 모두 8건이었다. 이는 지난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6.6건, 2002년 8건, 2003년 11건보다 훨씬 많은 뿐 아니라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걱정이다. 영광원전 역시 올 들어 벌써 2건의 가동중단 사고가 있었다. 원인별로는 발전관련 설비에서 발생

농협,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농협중앙회 사육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적이다. 농협은 이로써 민선회장 3대 연속 구속이라는 치욕적 기록을 안게 됐다. 농협 민선중앙회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세번째다. 정호선 초대 민선회장은 1994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후임 원철회 회장도 횡령 등의 혐의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민들의 조합인 농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 중앙회장의 잇단 구속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를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농협 수장의 잇단 비리도 전근대적인 농협의 시스템에서 발생

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출직 회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자선이 288조원대에 이르고 임직원도 6만명을 넘는다. 회장 중심의 독단적 경영행태와 방만경영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지만 당국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 회장의 구속으로 농협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회장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도 걱정이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회장직이 유지된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 책임인 신용(금융)과 경제(농산물 유통 등) 사업 분리방안 마련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 이번 사태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농협 내부에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시한을 앞당겨 회장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이 철저한 개혁을 통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창한 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겸 가사재판 재판장으로 근무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됐다. 친구들 중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녀석은 이혼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난 웃음으로 어쩔줄 답을 대신한다. 그러나 웃음만으로 넘길 수 없는 끈질긴 친구를 잘못 만난 때에는 할 수 없이 이혼사유 3종 세트인 '음주와 가정폭력, 부정행위, 무능력'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다만, 그럴 때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막기 위해 '무능력'이 성적 무능력

기고 송광운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가고 있지만 경상경비나 다른 예산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외의무분담금으로 신규사업과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실이 있는지는 질문에 100개 지자체 가운데 90개 지자체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복지비용이 증액될 경우에 대해서는 39%가 "감당하기 어렵다", 59%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 자치단체들이 복지분담금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이혼 법정역지사지(易地思之) 이 아니라 경제적 무능력까지 일깨워 주어야 한다(10명 중 반 이상은 그런 오해를 하는 듯하다). 가사재판을 하다 보면 사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가정생활 모습이 법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많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상당수 가정 속에 아직도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 전반에 남녀간의 건강하지 못한 불륜관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 놀랐었다. 또 경제적 무능력에서 비롯된 공평이 끝내 가정붕괴까지 초래하는 과정을 목도하고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혼법정을 찾는 부부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이혼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어떤 50대의 젊음아보이는 신사는 부인의 잔소리와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인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 거짓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묘수를 발취하였다가, 오히려 분개한 부인에게 역으로 이혼소송을 당

복지예산 차등보조율제 시행 절실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제도중의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동일 비율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상호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맞추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올해 우리 구 지방재정 자립도는 17.2%, 서구 22.7%, 광산구 21%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대비 우리 구 57.4%, 서구 49.5%, 광산구 48.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 북구청장>

청소용역원 매년 고용계약 갱신...비정규직법 악용 말라 어머니가 모 업체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일한지 6년이 조금 넘는다. 한 달 손에 쥐는 월급은 75만원, 식대 2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쥐는 돈은 70만원이 채 안된다. 지금까지 10년째 일한다는 다른 아주머니도 비슷하다. 빌딩이든 업체든 또는 공기업이나 대학이든간에 청소업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용역 발주기관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최저 낙찰가로 용역을 공모하고 입찰에 응찰하는 용역회사 역시 자

아시안컵 무기력... '월드컵 정신' 보여달라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축구를 보면 한심하다. 5년전 월드컵 때의 강인한 정신력과 파이팅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골문 앞에만 가면 발이 얼어붙는지 엉뚱한 데로만 슈팅을 날릴까, 한두 선수도 아니고 해외까지 나간 유명선수까지 한결같이 슈팅 부정확해 게임을 그르치는가. 그나마 낫다는 개인기도 피파 랭킹 100위를 넘는 팀과 붙어놓아도 금세 공을 빼앗기거나 서너 번도 못가 상대팀에 넘겨주는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과 이란, 사우디 같은 나라는 이걸 게

無等鼓 액더독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 은닉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등록초본 유출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개 꼬리가 뽀뽀를 흔든다는 뜻의 '액더독'이란 말은 권력자가 국민들 또는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1998년 개봉된 영화 '액더독'은 미국 현지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가상의 전정을 일으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린 뒤 재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스틴 호프만, 로버트 드 니로라는 호화 배역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졸작에 그쳤다. 영화가 화제에 오른 것은 개봉 직후, 1998년 12월 16일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지퍼게이트'에 빠져 있던 클린턴 대통령은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불린 이라크 공습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스캔들은 사라지고 전쟁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반복됐던 안보 상업주의의 재탕인 셈이다. 이라크는 영화가 현실화됐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이라크 전역에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 영화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